

『한국민주화운동사 2』 1970년대 민주화운동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글 · 정용욱 danggo@snu.ac.kr



『한국민주화운동사 2』 발간 소식을 접하며

10대 청소년과 20~30대 청년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고비마다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결성 배경과 경위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20대 청년의 구직난을 실감나게 만드는 ‘이태백’이라는 조어가 일상 용어로 자리 잡을 정도로 심각해진 청년실업 사태 속에서 대학생들에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조직은 취직시험을 위해 외워두어야 할 시사용어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들의 ‘스펙 쌓기’와 무관한 안드로메다 성운의 일로 치부되는 것은 아닐까? 시사 상식에 민감한 청년이라면 아마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공개 양심선언을 가능케 한 조직적 후원자 정도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음직하다.

알다시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유신체제 하에서 철저하게 유린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중세기적인 인권탄압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 평사제들이 만든 조직으로서 1974년 9월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도대체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전국 평신부의 반수 이상이 사제복을 입은 채 민주화운동 대열에 동참하였을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결성의 직접적 계기는 지학순 주교의 구속 사건이었지만, 그것의 결성 배경으로 박정희 독재정권의 폭압으로 질식 상황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걸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민주화운동 세력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결성 이후 유신체제 하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구속자 석방운동을 벌이는 등 인권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보루 역할을 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단체를 알고 있는가 여부가 아니다. 도대체 197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이어주는 끈은 무엇일까? 그들은 30~40년 전에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하는 것일까? 민주화운동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일군의 사람들의 젊은 시절 회고담이나 후일담으로 치부되는 세대에서 『한국민주화운동사 2』의 발간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 책의 발간은 무엇보다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현재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하나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 유신체제 하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이 시기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는 현재 개척 단계에 있고 그 성과도 한정된 수의 연구자가 생산한 논문집 또는 신문에 연재된 저널리즘적인 글, 현대사 통사·시대사나 사회운동사의 일부, 활동가나 활동단체 등 민주화운동 주체세력이 남긴 회고류의 글, 자료집 편찬의 취지에서 발간한 관련기관의 간행물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계의 연구가 부진하고,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인식 또한 그리 높지 않으며, 민주화운동이 과거의 한낱 이야기거리로 간주되어 땅각의 늪의 언저리를 맴도는 상황에서 『한국민주화운동사 2』의 발간은 이 분야 연구를 위한 학계의 노력과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 시기의 이른바 '과거사'를 해명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현재 시점에서 일단락되고, 또 그로부터 미래의 학문적·실천적 과제를 전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민주화운동사 2』가 유신체제 하의 모든 민주화운동을 총망라했다거나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는 정전(正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책의 발간은 관련 주제의 연구와 인식에서 하나의 준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음을 의미하고, 그런 면에서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민주화운동사 2』의 구성과 내용적 특징

『한국민주화운동사 2』는 유신체제와 유신체제 하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논한 총론, 1972년 유신체제의 성립부터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기 이전까지의 유신 반대 민주화투쟁을 다룬 1부, 긴급조치 9호 하의 지배구조와 반독재민주화투쟁을 다룬 2부, 당시 한국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을 다룬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부마항쟁과 유신체제의 붕괴도 물론 서술 범위에 포함된다.

1부 서술의 중심은 유신체제의 수립 배경과 수립 과정, 유신체제 하의 억압기구와 그 이데올로기, 유신체제 전기인 1972년 10월부터 1975년 5월 이전 반유신 민주화운동의 중심을 이룬 학생운동의 동향과 재야세력의 활동, 그리고 언론계와 종교계의 활동을 자세하게 분석한 부분이다. 이 시기 유신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학생운동의 조직적 동향과 각 대학의 시위양상 등을 시기별로 치밀하게 서술하였다. 서울대 문리대에서 시작해 서울대의 각 단과대학, 서울시내 대학, 나아가서는 지방대학까지 학생운동세력을 조직화하여 유신반대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조직된 학생운동의 연대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조직과 활동, 이 조직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탄압과 이를 위해 조작된 인혁당 사건, 그리고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재판과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시기 재야세력은 1973년 11월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의 시국선언을 시발로 하여 연이어 시국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973년 12월부터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개헌청원 100만인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974년 12월에는 민주회복국민회의를 창립하여 재야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또 종교계의 민주화운동은 1973년 4월 남산부활절연합예배사건을 시발로 하여 기도회, 시국미사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확산하거나 그를 위한 조직적 준비를 해나갔고,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결성되어 활동

을 개시하였다. 언론계도 1973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신아일보, 기독교방송, MBC 등의 기자들이 철야농성을 벌이거나 기자총회를 열고 언론자유 수호를 결의하는 등 언론자유수호투쟁을 벌였다. 또 1974년 10월 동아일보사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발표에 자극받은 30여 개 신문사와 방송사 기자들이 연이어 '실천선언'에 나서는 등 자유언론실천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1부는 이와 같이 긴급조치 9호 이전의 민주화운동을 시간적 전개과정에 따라 세밀하게 그려냈다.

2부는 '법 위의 법'으로 군림하였던 긴급조치 9호 하 유신체제의 억압기구 및 사회통제체제와 그 이데올로기, 긴급조치 9호 하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연대기적으로 치밀하게 추적한 부분이 역시 서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학생운동의 경우 긴급조치 9호 선포 직후 전개된 첫 시위였던 1975년의 서울대 '오돌돌(5·22)시위'로부터 시작해서 1975~1976년의 지하유인물 배포사건, 1977년 이후 각 대학의 시위와 유인물 배포사건, 1978년 6월에 들어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전개된 각 대학의 연합가두시위, 1979년 8월 YH사건 발생 이후 YH사건을 주요 이슈로 하여 학원가에서 전개된 유신철폐투쟁과 학원민주화투쟁에 이르기까지 1975년부터 1979년 박정희 사망에 이르는 시기의 운동 전개과정을 세밀하게 서술하였다.

이 시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구심 역할을 한 재야의 민주화운동은 긴급조치 9호라는 전대미문의 폭압을 뚫고 유신정권 말기에는 모든 민주화운동 단체들을 포괄하는 연대기구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는 유신 전기의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민주회복국민회의를 이끌어 왔던 재야 민주인사들뿐 아니라 민청학련사건 관련자, 해직기자, 해직교수, 문인 등이 재야의 민주화운동에 합세하였다. 또 1977년 12월 한국인권운동협의회, 1978년 3월 해직교수협의회, 1978년 5월 민주청년인권협의회 등이 발족하였고, 이미 조직되어 있던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상의 민주화운동단체들을 바탕으로 1978년 7월 민주주의국민연합이 결성되었고, 1979년 3월 1일에는 민주주의국민연합이 확대 개편되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으로 출범하였다. 이 단체는 과거 명망가 개개인들의 결집차원을 넘어서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그 조직화의 수준을 높였다.

유신체제 말기에 들어서면서 노동자·농민의 기본권·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1978년 상반기의 동일방직사건, 1978년 4월의 함평고구마사건, 1979년 8월의 YH사건은 모두 유신체제 하에서 민중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았고, 이들이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었다. 유신체제는 기층 민중운동이 조직화된 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을 철저히 억압하고 탄압하였다. 심지어 기층 민중운동의 성장

을 지원하는 영등포산업선교회나 NCC인권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탄압을 행하였다. 하지만 유신 말기에 민중운동은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노동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크리스찬아카데미, NCC인권위원회, 수도권도시선교협의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 학생과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과 연대 속에 조직 활동을 강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민중운동을 포함한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유신체제라는 전무후무한 폭압체제에 대결하는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서 그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 갔다.

2부가 긴급조치 9호 아래에서 전개된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이 시기의 민주화운동이 연대성을 강화해나가고, 또 민중 주체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가는 과정을 서술하였다면, 3부는 종교계, 언론·출판계, 지식인·문화인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등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일부를 이룬 각 부문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책은 1부와 2부에서 유신체제 하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을 시간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3부에 1970년대 이후 점차 조직화되기 시작한 기층 민중운동, 학생·재야세력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사상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종교인·지식인·문화인의 활동 등 각 분야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과 주체세력의 성장 과정을 배치함으로써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전체상을 요령 있게 전달한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이 시기 민주화운동의 세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무수히 남아 있고, 이 책은 그 쟁점들 하나하나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가 그리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이 그나마 이 시기 민주화운동의 전체상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 책 집필자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 책은 이 시기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우리 사회와 학계의 공동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기존 연구에 대한 충실한 연구사적 비판 위에 서 있다. 이미 발굴된 1차 자료를 충분히 섭렵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그동안 꾸준히 수집, 정리한 새 자료는 물론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각 기관의 보고서들까지 치밀하게 검토했으며, 관련자 증언 및 구술사(Oral history) 자료도 새로 발굴하여 활용하였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자료적 토대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학계의 논의를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Dynamic Korea’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비행기에서 내려 제일 처음 맞닥트리게 되는 한국을 알리는 광고판이다. 그 광고판은 한국인이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과

독재의 질곡 속에서 이룩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고귀한 성취와 그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자긍심을 잘 드러낸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불황의 여파로 한층 곤핍해진 민중 생활과 정치적 소통의 부재와 민주주의 원리의 실종으로 우리 사회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의 발간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확보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글 정용욱 |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